



대전 경제공약 돋보기 (5)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자 “자금 조달 부담” 실수요자 “내집 마련 난항”

‘공정 80% 이후 입주 모집’ 골자 주택법 개정안 최근 발의돼

입주시 단기간에 목돈 마련해야
업계 공사비 사전준비 부하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후분양제도는 사업주체가 건축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사업 착수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자금 조달 부

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증가해 분양가격이 올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진다.

후분양 시점까지의 이자비용, 건설원가 및 불가상승분 등은 수요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입주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땅값에 사업비, 공사비까지 자금을 미리 준비한 후 나중에 입주자들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에도 부담이 크다”면서 “이 같은 부담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G1강원민방 대표이사 회장에 조창진씨

조남현 사장 연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상지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조창진(64·사진) SG건설(주) 회장이 G1강원민방의 신임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G1강원민방은 28일 회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7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조창진 SG건설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회장은 “G1강원민방이 지역방송으로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

석사를 마쳤으며 SG건설 회장, 원주 한마음청소년 장학재단 이사장, 벨라스톤CC 회장, (재)황성인재 육성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임식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2층 강당에서 열린다. 한편 조남현 대표이사 사장은 연임됐다. 이하늘기자

“제진~강릉~삼척 철도망 구축 시급”

19대 대선을 앞두고 동해선 완성 등 철도 분야 SOC 확충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철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해선의 미연결 구간인 강릉-제진 노선과 복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강릉-삼척 노선 등 동해선 철도의 완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고 있다.

특히 강릉-제진 구간 철도는 춘천

‘동해선 완성’ 발전 최우선 과제
올림픽 철도 활용 위해 필수

지자체 공사촉구 목소리 커져

~속초 고속화철도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SOC 개선 사업으로 꼽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신규로 포함됐을 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릉-제진은 총연장 104.6km에 단

선은 2조~3조원, 복선은 5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대 구간인 강릉-삼척 구간도 동해선 철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미 포항-영덕 구간은 연말, 영덕~삼척 구간 122km 노선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나머지 삼척~강릉 등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 우선 동해시 등 지역에서는 당초 예정된 강릉 신호장에서 영동선으로의 1.9km 구간 연결 공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여주 전철도 조속

한 사업 추진에 대한 바람이 높다.

원주~여주 전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설계 등 후속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또 노선 내 문막읍 역사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는 “동해선 완성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고려한 필수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박영창·류재일기자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29일 오전 11시 경북 힐링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원주~강릉 레일연결 완료 연말 개통

오늘 강릉역서 연결식

올해말부터 KTX(고속철)가 운행할 원주~강릉 복선철도 120.7km에 열차 레일이 모두 깔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시종착역인 강릉역에서 원주~강릉 복선철도 레일 연결식이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해말부터 철도 레일을 타고 고속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서울 청량리역~강릉역까지는 최단 1시간 12분만에 주파가 가능하다.

원주~강릉 철도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강릉역에서 열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 노반공사에 이어 레일을 모두 깔기까지 4년 9개월이 소요됐다.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전 구간 레일 연결을 앞두고 이달들어 노반, 궤도 등의 전문가 점검팀을 구성, 도보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철도공단은 연말 개통을 위해 역사·시스템 등의 후속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7월부터는 시설물 검증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동열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29일 오전 11시 경북 영덕군 힐링터콘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G1강원민방 대표이사 회장

조창진 SG건설 회장 선임



조창진(64·사진) SG건설 회장이 G1강원민방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G1강원민방은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

를 열어 조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고 조남현 현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G1은 오는 30일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31일 본사 회의실에서 조창진 대표이사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조 회장은 황성 벨라스톤CC 대표, 황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창현 chpark@kado.net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설명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8일 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도내 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SOC예산 10년만에 '20兆' 붕괴 위기

기재부 2018 예산안 편성지침

신규사업 억제, 완공위주 투자
3년사이 6조이상 증발 전망
건설업계 '수주절벽' 불보듯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점을 찍었던 2015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6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증발할 수도 있어 건설업계의 심각한 수주절벽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확장적인 예산편성 기조는 유지하되,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보조 및 출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SOC 투자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신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비 및 운영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간은 물론 각계의 이견이 있지만, 국내 SOC 스톡(총량)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됐고 앞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22조~25조원 안팎에서 증감을 거듭했던 SOC 예산은 2008년(19조6000억원) 이래 10년 만에 다시

건협 강원도회, 건설업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설명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8일 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이해를 돕고자 도내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금 10조원대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SOC 예산은 내년 20조3000억원, 2019년 19조3000억원, 2020년 18조5000억원 등 매년 평균 6%씩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기재부는 SOC 예산 축소에 따른 공백은 민간투자자로 메워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민간투자 시장은 수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올해 대비 2조원이상, 앞서 고점을 찍었던 2005년(26조1000억원, 추경 포함)에 비해서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볼 때 건설시장은 심각한 수주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발주 공사 의존도가 큰 중소건설사들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5월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6~8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보완 또는 수정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방송권기자skbong@